

#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쿼터 4배 확대…자동차 분야 인력난 해소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승인...참여 대학 3곳으로 늘려  
AI 미래차·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집중...9월 학기부터 본격 유입

광주시가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가 광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 쿼터를 기존보다 4배 늘리고 참여 대학도 3곳으로 확대 승인하면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광주시가 요청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건의'를 최종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 참여 대학은 기존 서영대 1곳에서 동강대, 조선이공대가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유학생 배정 쿼터도 60명에서 240명으로 180명 증원됐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해 지역 대학으로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로 양성해 정주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별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서영대학교는 'AI미래자동차'에 가장 많은 120명 쿼터를 배정받았다.

동강대학교는 'AI미래자동차'와 'AI미래모빌리티' 등 2개 학과에서 80명을, 조선이공대학교는 '글로벌융합학부(글로벌기계융합전공)'에서 4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확대 승인 배경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의 높은 충원율을 꼽았다.

지난해 서영대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배정된 쿼터 60명 중 57명(충원율 95%)을 선발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선발된 유학생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연간 재정 능력 기준이 기존 1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절반가량 완화된다. 또한, 참여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수업료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숙사를 제공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 7~8월 중 법무부에 추천 명단을 제출하고, 9월 학기부터 유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적응을 돕고, 대학별 전담 교수제를 운영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경록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쿼터 확대는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과 자동차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2027년 정식 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월까지 우즈베키스탄(18명), 베트남(21명), 방글라데시(12명), 중국(5명), 스리랑카(4명) 등 5개국 60명의 유학생을 유치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회의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회의가 2일 나주 송월동 뉴나주시티호텔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여성 인권변호사 임선숙, 신임 감사위원 내정

### 광주지방변호사회 첫 여성 회장 출신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임선숙(60·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내정됐다. 감사원은 2일 김호철 감사원장이 공식인 감사위원 자리에 임선숙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영광 출신인 임 내정자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20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토박이 법조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창립 72년 만에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



진옥 국회의원이다.

한편,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마른김 가격 '역대 최고'... '금김' 한 장 150원 첫 돌파

마른김 가격이 3년째 고공행진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종품)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으로 집계됐다.

순별 평균 소매가격이 1500원을 뛰어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현재 가격은 2년 전보다 거의 50% 오른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장당 100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달 하순 장당 150원을

돌파한 것이다.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지난 2023년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연간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2023년에 전년보다 10% 오르면서 장당 100원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25%나 뛰었다. 지난해에도 8%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몇 년 사이 김 가격이 급등한 데는 수출 물량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 식락하는 '광주의 시내' 총장로

▶1면에서 계속

동구가 광주시 빅데이터(2019~2024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총장로 일대 월평균 방문객 수는 2019년 105만5919명에서 2024년 94만1733명으로 5년 사이 1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4대 소비 매출액(음식·숙박·레저·관광)은 2019년 34억5273만원에서 2024년 23억4026만원으로 32.2% 급감했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 '총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집약된 공간으로서 총장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목소리 담은 상권 활성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통성을 살리면서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은 "총장로는 역사·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광주의 중심이지만, 지역민의 발길이 끊겨갈 정도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라며 "전통성을 살리되 사람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전환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 개발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특별시 주 청사 소재지·의회청사, 특별법에 명시해야”

### 전남도의회, 필수제도 장치 강조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主)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 위치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수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과 지역 간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며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통합 초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정치권 등은 광주전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한다는 것과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세 곳을 균형있게 운영하며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

고 7월에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에 두기로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어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이 지난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며 "전남·광주가 공유해 온 호국 의병 정신과 동학농민혁명, 5·18정신 등 민주주의의 공동 가치 위에서 새로운 광역 공동체를 재창립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에 수록한 통합자치단체의 약칭(광주특별시)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한다며 공식 명칭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또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법제화와 국제 지원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발의 전 삭제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앞둔 목포대와 순천대, 이른바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의원총회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집행부 간담회, 시·군·구의회 간담회,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광주시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주청사 소재지 명시 등 이같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의장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남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와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도과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화재보험협회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IGFA 보험GA협회